

북한연구 동향 평가 : 성과와 과제

김영수*

- I. 문제제기
- II. 북한연구의 기원과 배경
- III. 북한연구의 변천과정
- IV. 북한연구 현황 분석
- V. 북한연구를 위한 과제

이 글의 목적은 한국에서 진행된 현재까지의 북한연구를 평가하고 실천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반공과 냉전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북한연구가 어떤 계기와 단계를 거쳐 오늘의 현황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변천과정을 살펴본 후, 북한연구 현황 분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한다.

연구주제가 다양해지고 연구결과의 양적 증가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연구가 ‘북한학’의 위상을 갖춰나가려면 정책봉사보다는 북한연구의 질을 높이는 전문성 고양의 제도적 틀을 정립해야 한다. 학술발표용어나 정책 분석에 치중하는 현재의 양상을 극복하지 못하면 ‘중복연구’와 ‘서로 배끼기’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다. 북한연구의 방법론도 제고해야 하며, 연구결과를 상호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북한연구자로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행 북한학과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주제어 : 북한연구, 북한학, 관련연구, 세대구분, 북한학과

*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 문제제기

북한 연구가 학문의 영역으로 인식된 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분단 이후 60년이 지났지만, 북한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었기에 북한을 객관적으로 설명·분석·예측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요컨대, 냉전체제 질서 속에서 북한은 적대적 대상이었고 체제경쟁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연구대상이 아닌 극복의 대상이었고 증오의 대상이었다. 특히 동족끼리의 전쟁을 치른 후유증으로 인해 북한을 객관적으로 언급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분위기가 오랫동안 남쪽 사회를 지배해 왔으며, ‘빨갱이’로 매도되는 양상이 종종 발생했다. 반공 이데올로기가 국시가 되고 국내 정치적 가치를 지배하던 시기의 북한 연구는 항상 ‘남한’의 정통성을 강화하고 정당화시켜주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했다.

그러던 중 박정희 체제가 1979년 10.26 사건으로 종말을 맞이함으로써 사회의 지배가치를 통제하던 반공중심체제에 변화가 서서히 일기 시작했다. 특히, 1980년대 초반부터 일기 시작한 ‘민주화’ 물결에 영향을 받아 1980년대 중반부터 전개된 ‘북한바로알기운동’은 북한 연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북한바로알기운동’이 주체사상과 북한체제를 긍정적으로 보려는 운동권 학생들의 주도로 전개되었지만, 북한에 대한 기존의 관심과 고정관념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여, 비로소 ‘북한’은 금기의 영역에서 공개된 장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 결과 북한은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인 학문의 연구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료 접근의 제한, 현지 조사의 불가능, 북한 정보의 독점, 전문 연구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연구가 체계적으로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연구대상으로 부각되면서 정부 당국의 자세도 달라져 북한연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연

구기관을 만들기 시작했고, 연구 과제를 일반 연구자들에게 나눠주고 연구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작동시키면서 북한 연구 환경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또한 대학교에는 학부와 대학원에 북한학과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연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밑그림 없이 시대적 변화를 쫓다보니 각양각색의 연구시각과 연구물이 양산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개론’에서 ‘각론’으로, 그리고 다시 ‘총론’으로 밟는 단계도 거치지 않고, 기초적인 연구도 제대로 해놓지 않은 채 각자 자기 전공 영역을 차지해서 ‘선점’ 또는 ‘독식’하는 연구자들의 분할 지배 현상이 너무 빨리 나타나기 시작했다. 북한연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론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도 진지하게 해보지 않고, 내재적 접근법을 둘러싼 인식론의 논쟁을 한바탕 벌인 후 ‘분석’보다는 ‘해석’에 안주하는 경향도 북한 연구의 일반적인 양상으로 일찍이 자리 잡았다.

북한 전문가가 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도 없이, 자칭 타칭의 북한 전문가가 양산되는 전문가 인플레이션상도 나타났다. 북한관련 사건도 많고, 지면도 많은데, 제대로 된 연구자가 없는 상황이 ‘필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되었다. 그 결과 북한연구에는 ‘거품’이 많다는 지적과 함께 전문성이 부족한 연구자에 대한 질책이 따라 붙게 되었다.

한편, 북한연구가 가진 특성상 북한연구의 대부분이 북한정치연구의 시각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북한을 객관적인 연구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비정치학 영역, 비사회과학적 영역의 연구는 아직 초보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 결과 ‘북한학’(North Koreanology)이란 용어를 붙일 정도로 북한을 연구대상으로 한 학문별, 학제간의 연구체계가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즉, 현재는 ‘북한학’을 정립하려는 지향하는 노력이 진행

되고 있는 것이지, ‘북한학’의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상태는 아니다.¹⁾

그렇다면 현재까지 진행된 북한연구의 성과는 무엇인가? 언제부터 북한연구가 시작됐으며, 그 계기는 무엇인가? 북한연구는 어떤 변화를 겪어 왔는가? 지금까지 진행된 북한연구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 글에서는 이런 문제에 초점을 두고 북한연구 동향을 평가하고자 한다.²⁾ 특히 북한연구가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에 역점을 두고 북한연구 동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II. 북한연구의 기원과 배경

분단 이후 북한연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요소는 ‘분단’ 그 자체였다. 분단으로 말미암은 적대적 남북관계는 북한연구를 지배하고 구속하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특히 냉전 시기 체제경쟁의 차원에서 비롯된 이데올로기 대립은 ‘남한’에서의 북한연구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구속하는 1차적 요인이었다.

그 결과 분단 이후 ‘남한’에서의 북한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환경이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북한체제의 비합법성, 6.25의 남침 입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비정통성, 가짜 김일성의 정체 규명, 북진통일 및 반공의 정당성 등이 북한연구 초기를 지배하는 주제였다. “한국에서의 북한연구는 시대의 아들이며 환경·조건변화의 산물”(박동운 1975, 176)이란 표현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

1) 그래서 이 글의 제목도 ‘북한학’ 대신 ‘북한연구’라고 잡았다.

2)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 진행된 북한연구 평가에 한정하고자 한다.

을 주제로 삼거나 ‘평화통일’을 언급하는 것은 사상성을 의심받거나 ‘빨갱이’로 오인 받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요컨대, 북한은 소련의 ‘괴뢰’이며 타도되어야 할 폭도단체라는 인식이 전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때라 사실상 북한연구는 학문적 연구영역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승공·멸공·반공의 시각에서 귀순자 및 북한 거주자의 체험기가 반복 적대감 조장용으로 출간되던 그런 시기였다. 이런 분위기는 6.25가 끝난 이후 더욱 고조되어 4.19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던 중 1960년 발발한 4.19는 대북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첫 계기로 작용했다. 반공과 반북 이데올로기에 지배당하던 상황에서 학생들이 시작한 새로운 ‘통일 논의’는 멸공 일변도의 대북 인식에 새로운 자극을 주었고, 북한이 타도의 대상만은 아니라는 당시 상황으로서는 매우 ‘시대착오적’인 인식과 논리를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오래 가지 못하고 5.16 쿠데타로 종결되었다.

5.16 이후 냉전체제 인식에 입각, 반공 의식이 주도하는 상황은 지속되었다. 그러나 달라진 점은 맹목적으로 반공 이데올로기만 강화하는 것보다는 타도 대상인 북한을 철저하게 연구해서 반북 및 반공의 구체성을 확보하자는 태도 변화였다. 그 결과 출현한 것이 1969년 발족한 ‘국토통일원’이다.

초기의 국토통일원은 단순한 북한 및 통일문제연구소 성격이었다. 그러던 중 남북관계 인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1972년의 ‘7.4공동성명’과 1973년의 ‘6.23선언’으로 인해 북한연구를 비롯한 공산권연구는 정부 차원의 지원에 힘입어 점차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 결과 북한연구 및 공산권 연구물이 1976년부터 예전에 비해 부쩍 증가하는 양상을 띠게 되는데, 1976년 이전까지 연평균 120여 건에 불과하던 연구물이 1976년 상반기부터 1977년 6월말 사이 무려 1,127건으로 증가(이상우 1981, 82)할 정도로 북한연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이 시기에 북한연구와 관련한 중요한 기구가 개설되는데, 중앙정보부가 주관하여 만든 ‘자유아카데미’가 바로 그것이다. 중앙정보부 차원에서 북한 및 공산권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고 판단, 전폭적인 지원으로 만든 박사급 수준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특수교육기관이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접하기 어려운 북한 원전 및 공산권 자료인 이른바 ‘불온서적’을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는 특혜도 오래가지 못했다. 중앙정보부 내의 권력관계 변화로 이를 주도한 멤버들이 힘을 잃음으로써 2기생 배출로 막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아카데미’는 북한 및 공산권 연구의 활성화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1978년에 배출된 1기생 20명, 1979년에 배출된 2기생 27명 대부분이 대학교수와 국가기관의 전문가로 자리 잡으면서, 일반 대학에서 공산권 및 북한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자유아카데미’ 출신들이 대학에 자리 잡도록 국민윤리학과 내지는 국민윤리교육과를 정부 주도로 새로이 만든 결과 대학교육에 북한연구가 접목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산권 및 북한을 연구하는 연구소를 각 대학과 언론사에 부설연구소로 설치할 것을 장려함으로써 동아일보 부설 안보통일문제연구소(1968년), 영남대 통일문제연구소(1969년), 동국대 안보연구소(1971년), 외국어대 소련 및 동구문제연구소(1972년)를 비롯, 강원대 통일문제연구소,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중앙일보 동서문제연구소, 한국일보 통일문제연구소 등의 16개 연구소가 1978년까지 개설되었다.³⁾

3) 사실상 대학 연구소의 북한연구 효시는 1957년 미국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아연)였다. 아연은 북한의 민족해방투쟁사에 대응하는 김준엽·김창순의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양호민의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정치』를 발간하고, 기초자료집인 『북한연구자료집』을 발간하여 대학연구기관의 북한연구를 개척한 바 있다.

또한 1971년에는 사단법인 북한연구소가 출범하여, 최초의 북한 관련 정기간행물인 『북한』지를 발간했는데, 북한연구와 관련한 독립된 정기간행물의 효시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북한』지 외에 『북한학보』를 발간, 초기 북한연구를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초대 이사장 오제도, 중앙정보부의 북한국과 심리전국으로의 이관 등의 변화를 겪으면서, 대표적인 관변연구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이와 같은 1970년대를 거치는 사이, 북한연구는 ‘금기’에서 ‘공개’의 장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연구의 대부분이 북한을 ‘알고 이기는 길’을 모색한다는 취지 아래 정부 주도로 이루어짐으로써, ‘선험적’인 결론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즉,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이고 공산주의는 나쁜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북한체제도 매우 나쁘다는 식의 논리가 주도했다. 특히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전체주의, 독재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는 것을 논증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그 결과 양적인 증가에도 북한연구의 성격은 크게 변하지 않는 양상이 이 시기의 특징이었다.

또한 이 시기 국토통일원에서 연구된 대부분의 연구물이 ‘대외비’나 ‘비밀’로 분류되는 바람에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으며, 대외비로 묶는 관습으로 인해 연구물의 수준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제도적 허점도 이 시기의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당시의 연구내용을 보면 북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공산권 연구에 활용한 사회과학적 분석틀을 활용하고 이론적 틀을 수립하려는 선행연구의 축적이 적지 않다. 그런데 이처럼 북한을 연구하는 선행연구가 축적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연구자들이 이전 연구결과들을 관변 연구로 치부하고 거의 참고하지 않음으로써 이전의 연구결과를 통째로 사장시키는 연구의 ‘낭비’도 초래되었다.

III. 북한연구의 변천과정

‘금기’의 영역을 벗어나기 시작한 시대의 산물인 북한연구는 1980년대 들어서면서 또다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특히 한국의 국내정치적 환경이 1980년대를 거치면서 전례 없는 질적 변화를 겪으면서 북한연구도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1980년 광주항쟁, 1986년 아시안 게임, 1987년 6월 민주화 투쟁, 1988년 서울 올림픽 등의 국내 사건과 소련 및 동구공산권 해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한국사회의 공산권을 보는 시각, 특히 북한을 보는 시각이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다. 특히 1980년 중·후반 대화가 운동권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시작한 ‘북한바로알기운동’은 북한연구의 지평을 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장기간 구축된 반공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운동권 학생들이 벌인 ‘북한바로알기운동’이 일반사회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얻진 못했지만, 서점가에는 북한 원전을 복사한 서적들과 북한체제를 홍보하거나 옹호하는 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서점에 나오기만 하면 정부에서는 강제적으로 거둬들이는 일이 반복되는 사이, 북한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들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만 만족하던 연구자들에게는 조선로동당 창당 40주년을 기념해 출간한 10권의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를 비롯, 『조선전사』, 『김일성 저작집』 등의 새로운 북한 원전은 북한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심과 연구의욕을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자극은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이른바 주사파 학생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반공 의식에서만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익숙해 있던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은 북한 과학원 철학연구소가 출간한 『다산선생 탄생 200주년 기념논문집』(1962), 최익한의 『실학파와 정다산』(1955), 정성철의 『실학파의 철학사상과 사회정치적 견해』(1974)와

같은 책을 보면서, “북한에서도 실학파를 연구하는구나”, “북한은 왜 실학파를 연구할까?”, “그렇다면 북한은 우리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는 학문적인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다. 요컨대, 반공 이데올로기적 해석에만 익숙하던 학생들에게 새롭게 알려진 북한에서의 ‘우리연구’ 또는 ‘북한연구’는 신선한 지적 자극제였다.

그 결과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운동권 학생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 벌인 ‘북한바로알기운동’은 운동권 학생들과 무관한 북한연구자들을 만들어내는 계기로 작용했고, 기존의 북한연구 분위기를 쇄신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더욱이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내놓은 정부의 7.7선언(1988년)은 북한연구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했다. 적극적인 남북대화 전향적인 북방정책의 추진을 표명한 7.7선언 이후 북한 및 공산권 국가의 원전들이 진보적 출판사에 의해 영인되거나 번각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1970년대 및 1980년대 출간된 북한 원전들이 서점가에 선을 보였다. 『정치사전』, 『철학사전』, 『력사사전』, 『문학예술사전』, 『현대조선말사전』 등을 비롯한 사전류와 『주체의 학습론』, 『조선전사』,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 등이 이 시기에 영인·번각된 대표적인 북한 원전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까지 관변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다른 연구내용들이 제시되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내재적 접근법을 강조하는 연구물이었다. 내재적 접근이란 북한체제의 특성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북한이 갖고 있는 그대로를 북한의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시각이었다. 송두율과 강정구 등이 주장한 내재적 접근법은 이의 문제점을 제기한 강정인의 비판(강정인, 1998)으로 인해 북한을 보는 인식론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북한연구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북한을 ‘해석’하는 것과 ‘분석’하는 것은 별개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시킴으로써, 북한연구방법론을

고민하는 계기를 만들어냈다.

한편, ‘북한바로알기운동’의 결과가 빚어낸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북한 당국이 선전·홍보하고 있는 내용을 북한의 실상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오류를 낳음으로써, 1970년대의 ‘추악한’ 북한과 1980년대의 ‘미화된’ 북한이 공존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일반인들이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마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일본 진보성향의 잡지인 『세카이(世界)』지가 일본 사회 분위기를 친북 성향으로 만드는 역할을 ‘북한바로알기운동’이 수행했다.⁴⁾ 더욱이 ‘북한바로알기운동’을 주도했던 운동권 내부도 북한체제에 대한 역사적 규정과 북한사회 성격 규명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으로 분열 양상을 보이면서 주사파 I, II로 나뉘는 바람에 북한을 바로 알 수 있는 후속운동을 더 이상 펼치지 못했다.

1980년대의 국내정세 변화와 공산권 진영의 약화·해체는 1990년대의 북한연구로 이어지면서, 1990년 을유문화사가 간행한 『북한의 인식』 시리즈로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을유문화사는 당시의 북한연구 전문가를 망라하여 『북한개론』, 『북한의 정치』, 『북한의 경제』, 『북한의 사회』 등의 총서를 발행했는데, 이런 형태의 북한연구서는 1970년대 중·후반 국가정보기관에서 북한연구소의 이름으로 간행한 『북한정치론』, 『북한경제론』, 『북한사회론』, 『북한외교론』 등의 각론으로 출간한 이후 처음이었다.

1990년대 북한연구의 중요한 계기는 다음 아닌 1991년 4월의 ‘민족통일연구원’ 개원이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구소련의 해체와 동구권의 붕괴 등 국제정세의 급변에 따라 한반도의 주변 정세와 통일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사회주의권과의 교류확대와 남북한

4) 『세카이』지의 북한 시각에 대해서는 김영수, 2005. “일본사회의 북한관: 실체와 변화 전망.” 『신아세아』12(1). 97-98 참조.

통일외교를 적극 추천하기 위해, 그리고 국민들의 바람직한 민족통일관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전문연구기관을 개원했다. 50여 명에 달하는 박사급 전문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북한 및 통일 관련 연구결과는 1990년대의 선도 역할을 하면서 북한연구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특히 민족통일연구원에서 연구된 연구결과는 매년 보고서 또는 단행본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연구자들과 일반인들이 북한연구 결과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국가기관에서 연구한 연구물은 관변 일변도라는 인식을 바꾸게 하는 계기를 만들 정도로 다양한 주제와 해석을 제공했다. 또 외국에서 유학한 연구자들이 사회과학적 분석틀을 북한 현상에 접목시키는 노력 또한 기존 북한연구의 진부함을 깨뜨리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1991년 당시 이흥구 통일원 부총리 시절 시작한 통일부의 신진연구자 대상 북한 및 통일관련 연구과제 응모는 북한연구의 영역을 확대하는 효과를 초래함과 동시에 비정치분야의 북한연구가 시작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자유과제와 지정과제로 나누어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연구비를 지급하는 응모제도는 박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를 갖춘 신진연구자들의 연구의욕을 북돋는 적지 않은 연구비라 북한연구의 저변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정치학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학문 전분야로 연구주제를 다변화함으로써 미개척지인 예술, 관광, 주택, 보건, 의료,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북한연구가 접목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통일부의 신진연구자 발굴 프로그램은 10여 년 후 신진연구자 과제에 응모한 연구자들의 모임인 ‘서울·평양학회’로 발전하게 된다.

한편, 1990년대 초반에는 북한연구를 전공으로 하는 연구자들의 소규모 연구모임이 결성되기 시작했는데, 1993년의 ‘북한연구회’가 그것이다. 류길재·이종석·김영수 등이 발기하여 김동한·김연각·김재용·동용승·최신림·허문영 등이 주축이 된 연구회는 1997년 『김정일 시대의 북한』을 출간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사회학 전공자들 중심으로 ‘북한사

회연구회'가 결성되었으며, 1990년대 말에는 북한연구자들의 또 다른 연구모임인 '현대북한연구회'가 결성되어 정성장·진희관·전영선·윤미량·이수석·신상진·우평균·서보혁의 『현대북한연구의 쟁점 1』을 출간했다. 이외에 북한 경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모임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자들의 소규모 모임이 연구 방법이나 인식의 차이에 따라 형성된 것이 아니고, 북한 연구를 위한 동호회에 가까워 뚜렷한 차별성을 찾기는 어렵다.

현재 북한 연구자들이 모여 만든 '북한연구학회'가 북한 연구자 모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⁵⁾ 1996년 12월 150여 명의 북한연구자들이 연구를 위한 정보와 연구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만든 학회이다. 그러나 워낙 다양한 학문분야에 속한 연구자들이 모여 학회를 구성하다보니, 정치학 중심의 연구자들 이외에는 이렇다할 응집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아직까지 북한 연구자들의 층이 얇은 것이 사실이다.

1990년대 북한연구의 두드러진 특징은 단행본과 석·박사학위논문의 증가이다.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보듯이, 단행본은 1980년대에 비해 약 3배, 석사학위논문은 약 2.5배, 박사학위논문은 약 6배의 양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박사학위논문은 1980년대 17편에서 1990년대 101편으로 양적 증가세를 보임으로써 1990년대에 들어 북한연구가 이전에 비해 얼마나 활성화되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해방 이후 형성된 북한연구 인력을 대략 크게 3세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기준을 통해서 보면, 1990년대 북한연구자의 특성이 더욱 분명해진다. 세대구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5) 북한연구학회의 정관을 보면, 정회원은 정규 대학과 이에 준하는 교육·연구기관에서 북한학 및 이와 관련된 학문 분야의 강의 또는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기관(정부, 기업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얻어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상임이사회 심사와 승인을 거쳐 회원이 된다고 되어 있다.

해방 이후 북한의 공산화 경험을 체험한 후 남쪽 사회로 넘어온 사람들과 해방 전후하여 사회주의 연구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 북한체제를 이념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을 북한연구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북한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거나 연구한 경력 대신 생생한 경험인 친숙도를 바탕으로 북한체제를 비판하고 반공이데올로기 강화에 일조를 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사회과학적 분석 능력보다는 친숙도가 강한 성향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1960-70년대 미국 등지로 유학을 가서 소련·중공과 같은 공산권 연구를 하고 들어와 정부의 북한연구 지원에 힘입어 북한연구의 기반을 만들어간 전문연구자군이 있는데, 이들을 북한연구 2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유학을 통해 연구대상을 분석하는 사회과학적 훈련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받은 강점을 갖고 있는 대신, 북한에 대한 친숙도는 상대적으로 약한 연구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북한 연구를 전업으로 하지 않고 비교연구나 국제정치 전공 실력을 바탕으로 북한연구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2세대 연구진에는 북한 연구를 전업으로 하는 많지 않은 소수의 전문 연구자도 포함된다.

북한연구 3세대는 2세대 연구자군으로부터 사회과학적 분석 능력을 훈련받은 후, 연구대상을 ‘북한’으로 해서 박사학위논문을 쓴 이른바 ‘토종’ 북한연구자들이다. 현재 3세대 북한연구자들이 북한연구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1990년대 학위를 취득하면서 북한연구의 ‘면허증’을 획득한 연구자들이다. 현재 3세대 연구자들이 배출한 신진 북한연구자들도 꾸준히 배출되고 있지만, 3세대 연구자들과 구별되는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지 않고 있고, 그 수도 많지 않아 아직은 4세대 연구진으로 분류되진 않고 있다.⁶⁾

6) 변천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연구자 개개인의 실명을 제시하지 않으려고 한다. 전부 열거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열거할 경우 연구자의 실수로 중

또한 북한연구 3세대에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에서 북한을 연구하고 돌아온 신진학자들과 민족통일연구원(현재는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국방연구원, 산업연구원, 기타 민간경제연구소 등에서 박사학위전공과는 무관하게 새롭게 북한을 전문영역으로 하는 적지 않은 수의 박사급들이 또 하나의 주력군을 이루고 있다(이종석 2000, 95).

이런 기준에서 보면, 1960년대까지의 북한연구는 주로 1세대들이 담당했고,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1990년대 중후반까지는 북한연구 2세대들이 주력군을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90년대 중후반부터는 북한연구 3세대들이 북한연구의 주력군으로 등장하면서, 이 시점을 계기로 북한연구 인력의 세대교체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북한연구의 주제도 이전 세대와 많이 달라지고 있다. 반공체제와 냉전 질서 속에서 전체주의적 시각에서 북한연구를 진행하고, 김일성 연구가 북한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양상과는 달리, 1990년대 연구자들은 북한체제의 특수성이 어떻게 하여 성립되었는가를 규명하기 시작했으며, 주체사상은 북한체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수령의 차원만이 아닌 북한 인민들의 수준에서 북한사회를 보려는 접근을 시도했다. 이와 함께 정치학 중심의 연구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역사·사회·경제·법학·문학 등 비정치학 분야의 연구도 동시에 진행되는 새로운 양상을 나타냈다. 김성보의 “북한의 토지개혁과 농업 협동화”(1996, 박사학위논문), 서재진의 『또 하나의 북한사회』(1995), 김재용의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1994) 등은 역사·사회·문학 분야의 시각에서 북한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요한 역할을 수행한 연구자를 빠뜨리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기 때문이다. 시대별 개인 연구자에 대해서는 이종석 2000; 서동만 1998; 박형중 1999; 산사연 북한사회연구반 1993을 참조.

한편, 1990년대 북한연구 저변의 확대에는 대학원과 학부의 북한학과(북한·통일정책학과) 설치가 큰 영향을 미쳤다. 북한학과 개설은 1988년 개원한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이 1990년 북한전공을 북한학과로 증과한 것이 효시이다. 이후 학부 수준에선 1994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를 시발로 모두 6개의 북한학과가 설치되었다. 이후 1998년 경남대 북한대학원이 개설됨으로써 북한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제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했다.⁷⁾

IV. 북한연구 현황 분석

시대적 상황에 따라 빠른 속도의 변천과정을 거친 북한연구는 현재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는가? 시기별로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가? 2000년대 들어서서 북한연구는 지속적으로 양적 증가를 보이고 있는가? 연구주제들은 어떤 분포를 보이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보기 위해 국내에서 출간된 북한관련 단행본과 국회도서관에 등록된 석·박사학위 논문을 계량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북한관련 연구 동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국회도서관 검색 시스템인 단행본 및 학위논문 문헌정보시스템을 활용했다. 논문명으로는 검색되지 않는 연구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논문명(title)과 핵심단어(key word)를 병행 검색했다. 박사학위논문의 경우는 북한연구의 호

7)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북한학과는 통일연구의 비중을 고려하여 1999년 북한·통일정책학과로 학과 명칭을 변경했고, 경남대 북한대학원은 2004년 11월 단설대학원으로 인가받아 '북한대학원대학교'라는 전문대학원으로 새 출발했다. 학부의 북한학과는 관동대와 조선대가 학과를 폐지·통합함으로써 현재는 동국대, 명지대, 고려대, 선문대에만 개설되어 있다.

름과 현황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란 점을 감안하여, 기존에 출간된 박사학위논문 목록집과 대조하면서 빠진 것을 보충하는 보완작업을 거쳤다.⁸⁾

먼저 북한을 연구 주제로 쓴 박사학위논문 현황을 보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다시피 1970년 “북한 행정권력의 변질요인에 관한 연구”(이문영, 고려대)를 시발로 2005년 말 현재 총 235편의 북한관련 주제의 박사학위논문이 국회도서관에 등록되어 있다.⁹⁾

〈표 1〉 박사학위논문 현황 (2006년 2월 5일 현재) 총 235편

취득연도	논문수	취득연도	논문수
1970	1	1990	5
1971-1973	0	1991	12
1974	1	1992	16
1975	1	1993	9
1976	1	1994	5
1977	1	1995	9
1978	1	1996	7
1979	2	1997	11
1980-1981	0	1998	13
1982	0	1999	14
1983	2	2000	14
1984	0	2001	13
1985	4	2002	19
1986	0	2003	18
1987	4	2004	27
1988	4	2005	18
1989	3	2006	?

8) 박사학위논문 목록 확인을 위해 북한연구소에서 1986년 간행한 『북한관계 석·박사 학위논문목록(1948-1985년 2월)』과 강성윤의 “『북한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1999)에 실린 북한관련 박사학위 목록을 참조했다.

9) 2005년도 박사학위논문 수가 검색일(2006년 2월 5일) 기준으로 18편인 점에서 아직 미등록된 논문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는 석사학위논문과 단행본 출간에서도 같은 상황이라고 보고 ?표로 표기해 두었다. 이 숫자는 추후 보완할 예정이다.

시기별로 보면 1970년대(1970-1979) 8편, 1980년대(1980-1989) 17편, 1990년대(1990-1999) 101편, 2000년대(2000-2005) 109편으로 나타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80년대 연평균 1.7편에서 1990년대에는 연평균 10.1편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서 1990년대의 북한연구가 얼마나 양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증가세는 2000년대 들어서도 더욱 빨라지고 있는데, 연평균 18.2편으로 1990년대의 약 2배에 육박하고 있을 정도이다.

양적 증가와 함께 연구주제는 어떤 분포를 보이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가장 최근인 2005년의 박사학위논문 18편의 제목을 검토했다. 구체적인 연구주제를 보기 위해 논문제목에 제시한 후 주제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북한체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정치)
- 북한 선군정치하의 당·군 관계(정치)
- 북한의 대남 통일선전전략에 관한 연구(대남전략)
- 북한 핵 위기관리 연구: 1차 핵위기를 중심으로(정치/외교)
- 북한 핵문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정치/외교)
- 남북한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북한지역 산업단지 입지 분석 연구(경제)
- 북한 교육관료제의 변천에 관한 연구(교육)
- 북한 형법체제의 특수연구: 특히 인권문제를 초점으로 하여(법)
-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통일/사회문화)
- 통일 후 북한 부동산의 처리에 관한 연구(통일/경제)
- 북한 인권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인권/사회문화)
- 남·북한 태권도 비교분석을 통한 이질화 극복 방안(체육)
- 북한 시문학의 이데올로기적 담론구조 연구(문학)
- 북한의 문예정책과 구비문학의 활용 양상 연구(문학)
- 북한 역사소설 연구(문학)
- 김정일 통치 시기 가족 멜로드라마 연구: 북한 근대성의 변화를 중심으로(방송)
- 북한선교 역사와 현황이해를 통한 효과적인 선교정책의 원리와 방

향에 관한 연구(종교)

○ ‘정성운동’이 북한 보건의료에 미친 영향(보건의료)

기존의 계량적 분석에서 지적(송승섭 1998)한 것과는 달리 정치분야 편중도가 많이 약화되는 대신 문학·방송·종교·체육·보건의료 등 비정치 분야의 연구주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다양화 경향은 2005년만의 특징이 아니라 2004년의 논문제목에도 나타난다. 이는 최근 북한연구가 1990년대와는 다르게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2005년 말까지 발표된 235편을 대상으로 주제를 분류하면, 정치 93편(39.6%), 경제 20편(8.5%), 법 17편(7.2%), 행정 17편(7.2%), 교육 14편(6.0%), 문학 9편(3.8%), 예술 8편(3.4%), 역사 6편(2.6%), 사회복지 6편(2.6%) 등의 순으로 여전히 정치 분야의 연구가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5년까지 발표된 석사학위논문 현황은 <표 2>와 같다. 1963년 “남한과 북한에 있어서의 外援과 그 성과”(박영희, 서울대 행정대학원)와 1964년 “북한공무원제도의 고찰”(홍진석,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석사학위논문을 선두로 2005년 말 현재까지 총 2,67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 박사학위논문 수의 11배를 상회하는 편수이다.

석사학위논문 현황을 보기 위해서 박사학위논문 검색과 마찬가지로 국회도서관 학위논문 검색시스템을 활용, 논문제목과 핵심단어를 병행하여 검색하였다. 그러나 워낙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수작업을 통해 일일이 대조하면서 보완하는 작업은 실행하지 못하고, 검색시스템에 나타난 숫자를 그대로 활용했다.

<표 2>를 보면, 1960년대 8편, 1970년대 86편, 1980년대 437편, 1990년대 1,049편으로 연대별로 석사학위논문 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00년대는 연평균 183편으로 1990년

대 연평균 104.9편에 비해 2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석사학위논문은 일반대학원, 일반대학의 특수대학원, 기타 특수·전문대학원 등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1998년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일반대학원 34.3%, 일반대학의 특수대학원 60.8%, 기타 특수·전문대학원 4.9%로 나타나 있다(송승섭 1998).

총 2,675편을 주제별로 보면 정치(30.6%), 행정(13.6%), 경제(11.1%), 예술(4.2%), 교육(6.9%), 순수과학(3.9%), 종교(3.5%), 사회복지(2.8%), 법(2.6%)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런 분포 순위는 박사학위논문의 주제별 순위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행정대학원, 교육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신학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 경제대학원 등의 특수대학원에서 북한관련 논문을 생산하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표 2〉 석사학위논문 현황 (2006년 2월 5일 현재) 총 2,675편

취득연도	논문수		취득연도	논문수	
1945-1949	0	0	1990-1994	472	1,049
1950-1959	0	0	1995-1999	577	
1960-1964	2	8	2000	172	915
1965-1969	6		2001	163	
1970-1974	19	86	2002	195	
1975-1979	67		2003	178	
1980-1984	164	437	2004	207	
1985-1989	273		2005	180	
			2006	?	

이번 연구에서는 논문주제의 중복 정도와 유사 결론 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지 않았지만, 석사학위논문의 주제만 보더라도 중복연구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특수대학원이 재교육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북한연구의 진전을 위해서 논문주제의 중복과 유사결론에 대한 계량적 분석 결과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생

산된 논문을 평가하고 논문지도의 방향을 북한연구자들이 엄격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표 3〉은 북한관련 단행본 출간 현황이다. 해방 이후부터 2006년 2월 5일 검색일까지 발간된 단행본은 총 2,243권이다. 1950년 공보처에서 발간한 『소련 군정의 시말: 북한 분할과 적화음모의 정체: 평안남도 편』을 시작으로, 1952년 玄秀의 『赤治六年의 북한분단』(국민사상지도원), 1953년 조석호의 『해부된 흑막: 남로당원이 본 북한』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단행본의 제목을 보면 북한에서 북괴로, 북괴에서 북한으로 변하고 있는 양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북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단행본 발행권수가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89년을 시점으로 해서 단행본 발행권수가 연평균 100여 권을 상회하기 시작한 것이 눈에 띄며, 2000년대는 연평균 120권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단행본은 석·박사학위논문 생산과는 달리 시장과 수요를 고려해야 하는 요인이 작용하여 그 증가세가 완만함을 알 수 있다.

단행본의 주제와 필자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석·박사학위논문과 같이 주제별로 분류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최근 들어 학술서적이 아닌 단행본이 부쩍 늘고 있어, 북한연구에 도움이 되는 학술서적을 제대로 선별해내기도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연구의 수준을 가늠하는 교재나 학술서가 발간되어 북한연구의 질적 제고를 유도하고 있다.

단행본 목록 가운데 『북한학』, 『북한학개론』, 『북한학총론』이라는 입문서가 1980년대 초반 발행된 것부터 2005년에 신간된 것까지 합하면 대략 15권 된다. 북한을 전공하는 연구자들끼리 한 편씩 써서 모은 형태, 한 사람의 필자가 북한 관련 내용을 통일부의 『북한개요』 형식으로 쓴 것, 특정 대학의 교재를 위해 편집한 것 등 다양한 형식의 입문서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대학 학부 교재용으로 독자의 수준을 고려하고 책 전반의 짜임새를 고려하여 출간되는 교재는 그리 많지 않다. 그만큼 개론이나 총론을 구성하고 집필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최근에는 기획·집필단계에서부터 입문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책들이 출간되고 있다. 예컨대, 『새로운 북한읽기를 위하여』,¹⁰⁾ 『북한이해의 길잡이』¹¹⁾ 등이 입문서로서의 특성을 비교적 잘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연구학계에서 필요로 하는 『북한연구 방법론』¹²⁾과 같은 북한연구의 틀을 잡아주는 단행본도 출간되어 도움을 주고 있다. 연구방법에 대한 논의와 심화 없이는 해당 영역의 체계와 수준을 제고하기 어려운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한편, 『북한의 경제』,¹³⁾ 『북한의 과학 기술』¹⁴⁾과 같은 전문서도 출간되어 북한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있다.

〈표 3〉 단행본 출간 현황 (2006년 2월 5일 현재) 총 2,243권

출간연도	발행권수		출간연도	발행권수	
1945-1949	0	0	1990	103	482
1950-1959	6	6	1991	93	
1960-1964	6	23	1992	74	
1965-1969	17	171	1993	83	
1970-1974	44		1994	129	
1975-1979	127		1995	134	559
1980	13	309	1996	117	
1981	13		1997	108	
1982	21		1998	100	
1983	13		1999	100	
1984	19		2000	123	633
1985	15		2001	126	
1986	16		2002	138	
1987	26		2003	134	
1988	66		2004	112	
1989	107		2005	59	59
			2006	1	?

10) 박재규 편 2004; 같은 책. 증보판, 2005.

11) 김성철 외, 『북한 이해의 길잡이』(서울: 박영사, 1999); 같은 책, 개정판, 2005.

12) 경남대 북한대학원 편. 2003.

13)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편. 2005. 한울.

14) 이춘근. 2005. 한울.

V. 북한연구를 위한 과제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연구는 시대적 상황이 빠른 속도로 변하는 여건 속에서 연구주제의 다양화 현상과 양적인 증가세를 뚜렷하게 보여 왔다. 그럼에도 북한연구가 ‘북한연구’의 수준을 극복하고 ‘북한학’의 위상을 갖추려면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우선, 거품이 많다는 지적을 수용해야 한다. 필자가 연구자보다 많다는 지적, 연구보다는 정책에 봉사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 학술회의 발표용에 그치는 얇은 수준의 연구가 주를 이룬다는 지적(서동만 1998)에 경청하면서 이를 극복하고 지양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지적은 바로 전문성 부족을 일컫는 말이다. 북한연구를 진지하고 깊이 있게 하지 않고 시사적인 수준으로 북한연구자임을 자처한다는 뜻이다. 이런 지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북한연구의 질을 높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북한연구의 거품을 거둬내는 길은 북한연구자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얇은 수준으로서 전문가 행세를 못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둘째, 북한은 ‘특수’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분석이나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방어논리를 더 이상 활용해서는 안 된다. 북한연구가 과학적인 방법론을 경시한다는 지적을 종종 받는다. 또한 북한연구에는 이론적 틀이 없다는 지적도 종종 받는다. 이것은 북한이 ‘특수’하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연구를 ‘특수’하게 해 왔기 때문에 받는 지적이다. 북한연구를 위해 어떤 연구방법론과 접근법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깊이 있게 해오지 않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연구의 방법론을 다룬 교재가 이제 막 출간된 상황이 이를 잘 말해준다. 1990년대 내재적 접근을 둘러싼 논쟁은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는 인식과 해석의 논의였지, 북한을 분석하는 방법론 논의가 아니었음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셋째, ‘특수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법론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초연구에 충실해야 한다. 북한연구 성과를 보면 2, 3차 자료가 1차 자료를 압도하고 있다는 지적을 종종 받는다. 북한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는 1차 자료 확보 없이 해석만 있다는 지적도 종종 받는다. 이런 지적은 바로 북한연구가 목적론적 차원에서 주로 북한정치연구에만 치중했을 뿐 여타 북한 관련 자료 수집과 분석에는 소홀히 했다는 뜻이다. 1차 자료의 축적 없이는 북한체제의 특성을 정확히 읽을 수 없다. 연구 과정에서도 분석틀과 이론만 있지 실제로 적용할 1차 자료가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런 양상은 1990년대 북한연구에 이론적 분석틀이 없음을 비판하면서 논문 서두에 그럴듯한 이론을 제시했던 연구자들의 연구물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사회과학적 분석틀에는 익숙했지만, 막상 북한연구에 필요한 친숙도를 확보하지 못했던 연구자들이 빚어낸 미흡함이었다.

넷째, 북한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분’을 ‘전체’로 해석하는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평양만 2박3일 다녀와서 북한이 이렇더라고 말하는 식으로 북한연구를 해서는 안 된다. 함경북도 회령의 물가가 마치 북한 전체의 물가인양 해석하는 것도 이제부터는 삼가야 한다. 기존의 북한연구를 보면 부분적일 수 있는 북한사회의 현실을 마치 전체적 현상인 것처럼 논의하는 ‘전체성의 오류’(이우영 2005, 127)를 많이 발견하게 된다. 이런 오류를 범하는 가장 큰 원인은 어떻게 말하든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그러나 가보지 않고도 살아보지 않고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활용된다면 전체성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인류학에서 쓰는 ‘원거리 연구’(long distance study)가 그것이다(이우영 2005, 124). 직접 방문이 어렵더라도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자료만 확보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북한연구는 원거리 연구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예전과 다르게 많이 달라졌다. 북한에서 살

다 온 사람들이 남쪽 사회에 8천 명을 상회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얘기하는 것만 지속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수집한다면 북한지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북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을 연구에 제대로 활용하게 되면 북한을 ‘미시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들이 증언하는 ‘북한’을 통해 북한 내부자체를 새롭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현재 열려 있다. 또한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 사회를 직접 경험한 인원과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북한 내부를 지속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와 확률은 예전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증가되어 있다.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북한체제가 싫어 넘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북한의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종종 지적되기도 한다. 그러나 연구자가 탈북동포들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연구주제를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필요한 증언을 효율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있다면, 북한체제의 특성과 작동원리, 특히 북한 사회 내부의 변화 양상을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들’을 통해 파악하는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은 아직까지 없다고 본다.

다섯째, 연구결과를 상호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북한연구 현황 자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연구결과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제도나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최근 들어 적지 않게 양산되는 석·박사학위논문이라도 상호 검증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제의 중복을 피하고 반복연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답습’과 ‘급조’를 막고, 서로 베끼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부정적 요소를 방지하는 방안과 함께, 학위논문 및 단행본 그리고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등재 후보지 포함)에 실린 인용 횟수를 산정·공개함으로써 우수한 논문이나 단행본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도 구축하여 연구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역할을 대부분의 북한연구자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북한연구학회’가 맡는다면 학회의 위상 제고에도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학부와 대학원에 설치된 북한학과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북한학과 과목은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군사 등의 익숙한 분류를 토대로 개설되고 있다. 교수 충원 당시 전공 분류를 익숙한 기존의 방식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과목 개설도 이런 분류에 의존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분류가 북한을 설명·분석·예측하는데 얼마나 적실성을 갖고 있는지 성찰해 보아야 한다. 유기체적 특성을 강하게 띠고 있는 북한체제를 정치·경제·사회 등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이런 분류에 더해 수령·당·인민의 시각에서 접근·분석하는 새로운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나오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또한 북한학과 교육과정 개편을 고려할 때, 북한전공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말만 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 대신 영어 이외에 주변 강대국 언어인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노력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이 점을 제도적으로 수용하여 사회가 북한학과 출신을 선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학과 장래를 내다볼 수 있다. 현재와 같은 교육과정으로는 사회과학적 훈련도 부족하고 북한에 대한 친숙도를 체화하는 데도 미흡해 북한학과 출신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북한연구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교사회주의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면서도 중국·베트남·쿠바를 비롯하여, 동구권 지역의 언어 이해력이 따르지 못해 비교연구는 거의 미개척 상태에 있다. 외국어 능력은 국내에서 학위를 받은 3세대 연구자의 아킬레스건이라는 점에서 3세대 연구자들의 후속 세대를 경쟁력 있게 키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

요컨대, 북한학과 교육과정을 사회과학적 분석능력 숙지, 친숙도 확보, 언어 능력 확보의 차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지적한 기존 북한연구의 문제점을 좀처럼 벗어나기 어려우며, 북한연구 및 북한학과의 위상을 제고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참고문헌

- 강성윤. 1999. “‘북한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북한연구학회 편. 『현대 북한연구의 쟁점(1)』. 서울: 한울.
- 강정인. 1998. “북한 연구 방법론: 재론.” 『1998년도 추계학술회의 논문집 II』. 서울: 한국정치학회.
- 경남대 북한대학원 편. 2003. 『북한연구 방법론』. 서울: 한울.
- 구갑우. 2002. “북한 연구의 ‘국제정치’: 오리엔탈리즘 비판, 『현대북한연구』 5(1).
- 김남식. 1988. “북한연구 현황과 문제점.” 『말』 25.
- 김영수 외. 1997. 『김정일 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김영주. 1999. “북한언론 연구.” 북한연구학회 편. 『현대 북한연구의 쟁점(1)』. 서울: 한울.
- 김한교. 1985. “해외에서의 북한연구 현황.” 『북한』 165.
- 류길재. 1998. “김정일 시대의 북한과 지역연구로서의 북한학의 필요성.” 『세계지역연구논총』 12.
- 박동운. 1975. “북한연구의 이해와 현황: 정치(내막폭로에서 학술연구단계로).” 『북한』 37.
- 박재규 편. 2004. 『새로운 북한읽기를 위하여』. 서울: 법문사.
- 박형중. 1999. “북한정치 연구.” 북한연구학회 편. 『현대 북한연구의 쟁점(1)』. 서울: 한울.
- 북한연구학회 편. 1999. 『분단 반세기 북한 연구사』. 서울: 한울.
- 산사연 북한사회연구반. 1993. “북한사회 연구동향: 80년대 말 이후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7.
- 서동만. 1998. “북한 연구에 대한 반성과 과제: 90년대 연구성과와 문제점.” 『1998년도 추계학술회의 논문집 II』. 서울: 한국정치학회.
- 송승섭. 1995. “분단 이후 북한연구의 현주소를 진단하다: 석·박사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북한』 281.
- . 1998. “북한관련 연구 동향의 계량적 분석: 석·박사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북한』 313.
- 이상우. 1981. “북한연구.” 한국공산권연구협의회 편. 『공산권 연구현황』. 서울: 법문사.
- 이서행. 2000. “북한학의 연구동향과 발전방향.” 『북한연구학회보』 4(2).
- 이우영. 2005. “북한 사회연구 혹은 사회학적 북한연구.” 8(1).

- 이종석. 2000.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 임순희. 1994. “북한여성 연구동향과 연구의 한계.” 『북한』 269.
- 전상인. 1999. “북한사회 연구.” 북한연구학회 편. 『현대 북한연구의 쟁점(1)』. 서울: 한울.
- 최대석. 1999. “북한연구의 축적과 저변확대의 성과.” 『북한연구학회보』 3(1).
- 최완규. 1994. “북한연구 방법론: 반성과 제언.” 『세계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 서울: 한국정치학회.
- 현대북한연구회 편. 2005. 『현대 북한연구의 쟁점(1)』. 서울: 한울.
- 황성모. 1989. “북한학 연구방향에 관한 일성론.” 『북한』 210.

North Korean Research Trend in South Korea :
Realities and Problems

KIM, Young-Soo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Sogang University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alities and problems of North Korean research trend in South Korea. Until 1970's North Korean research was advanced from anti-communism ideology and cold war atmosphere inside. It passed by a democratization process and North Korean research was stepped a new change phase.

To raise the level of North Korean research, first of all, the system which verifies a research result is necessary. It will reach and to lead problem of duplication research must be solved. To make the North Koreanology, North Korean researchers must develop a research method and must be complete in fundamental research. To raise the specialist who is competitive power, it must improve the university and graduate school curricula of North Korean Studies.

The main contents of this article is to answer related questions such as: What is the result of North Korean research? What kind of change process? What are the main reasons of change? How is the research present condition? What are the problems? What are the improvement programs?

Key Words : North Korean Studies, North Koreanology, Department
of North Korean Studies, Government center research,
Anti-communism ideology